

전북 농민들, 나락 적재투쟁 돌입

도청 앞에서 전국 처음 160여톤 적재... "25일부터 14개 시·군 확대·24일 농협 규탄 회견도"

쌀값 폭락에 빨 난 도내 농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160여톤의 나락을 적재하는 등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 30여명은 20일 전북 도청 앞에서 쌀값 대폭락 전북농민 나라 적재 투쟁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쌀값이 30년 전으로 폭락하면서 5만 원 대던 쌀값이 3만3천원까지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적자를 이유로 150억 원을 가마(40kg)당 2,000원씩 보전해주는 부분에 대해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농협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전북 지자체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특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데 반해, 정작 쌀값 폭락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풍년 농사를 지은 농민 탓으로 돌리

고 있어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현재 재고미가 175만톤에 이르르고 이 가운데 수입쌀은 46만톤으로 전체 물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쌀 수입이 쌀값 폭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저가 수입쌀 41만톤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재고미 해결을 위한 대북 쌀 교류 추진, 정부의 쌀

100만톤 수매계획 마련, 부동산 투자 조정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등을 주장했다. 농민회 전북 도연맹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쌀값 폭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라 적재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24일 농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시민단체, 발암물질 배출 미원상사 특별점검 촉구 회견

전북민노총과 전북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전북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 배출기업인 미원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메디안 치약에서 기생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식약처가 긴급 회수에 나섰고, 부광제약 등 다른 업체의 제품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들이 공통으로 원료를 납품 받은 업체는 미원상사 봉동공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원상사는 완주군 봉동읍으로 공장을 이전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발암물질인 벤젠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며 "이들이 10년 동안 배출한 벤젠은 65톤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전북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된 발암물질은 모두 26종, 2,206톤이고, 대기 중으로 배출된 양은 386톤이다. 특히 이 중 1급 발암물질 7종, 10톤은 대기 중에 노출됐다. 단체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톤을 미원상사가 배출했다고 성토했다. 단체 관계자는 "많은 도민·노동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여태껏 생활해 왔다"며 "전북도는 미원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20일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도, 울산 현대중공업에 선박건조 물량 요청

송하진 도지사 등, LPG선 2척·원유운반선 2척 물량의 지역적 안배 요구 예정

전북도 등이 도내 조선업 위기 모색을 위해 울산 현대중공업 측에 선박건조 물량을 요청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은 21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아 최길선 회장과 강환구 대표 등을 만나 군산조선소의 위기 상황과 군산조선소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선박건조 물량 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군산조선소는 작업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군산조선소에 배정된 LPG선박 2척도 지난 7월 울산 본사로 이전되면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작업물량이 없는 상황이다.

군산조선소는 작업물량이 소진된 사내와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 700여명이 이미 실직한 상태며, 현재까지 배정된 선박 건조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을 앞두고 있다. 도지사와 군산시장, 군산시 의회의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산의 양대 대표산업인 자동차·조선 산업이 지속적인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2018년부터는 조선업계가 회복세로 전망되므로 군산조선소가 내년 1년 동안 도크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울산으로 재배정된 LPG선 2척과 금번 수주된 원유운반선 2척 물량의 지역적 안배를 요청한다. 또한 "군산조선소는 경영의 효율적

인 측면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경제 유지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시 지난 10여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구축된 시설 및 기술 인력의 인력 확보 시간과 시설운영 구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조선소는 도크가 1개뿐이므로 도크 폐쇄는 대량실업과 전북산업의 대량 붕괴로 이어지며 경제적 손실과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선박건조 물량을 배정해 주기를 요청할 것"이라며 전북과 군산시의 물량배정 건의서와 군산상공회의소 건의문 등을 전달키로 했다. /고민형 기자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도, '달빛어린이병원' 공모 중... 내년 1월부터 보상

전북도는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공모를 20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접수기간과 제출서류, 선정방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정된 병원의 및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이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공모사업계획서상 약속된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달빛이 증가 등 자녀양육여건의 변화로 달빛어린이병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료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의료기관 등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제도다. /고민형 기자

도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대부분 '0'

정호윤 도의원 "총 1145명 중 장애인은 17명 불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일 정호윤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출원기관과 공기업 14곳 중 8곳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0%인 기관은 전북 연구원을 비롯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이다. 군산의료원은 정원 389명에 7명으로 1.8%, 남원의료원은 301명(계약직 3명 별도) 정원에 4명 고용으로 1.32%에 그쳤다.

그나마 전북도인재육성재단만이 29명 정원에 장애인 2명으로 6.9%로 전북도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전체 정원의 3% 이상이다. 군산·남원의료원을 제외한 기관들

의 직원 수는 기관 당 최소 7명에서 80명에 달해 규정상으로는 1~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처럼 이들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 정원이 1,145명인 이들 14개 기관의 장애인 채용은 17명에 불과해 고용률은 1%를 웃돌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려고 해도 신규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 의무고용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호윤 전북도의회 의원은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장애인의 고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야 하지만 전북도 출원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24일부터 하반기 교량 일제 정기점검 나서

전북도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량 안전점검'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특정관리대상 교량 등 총 548개소에 대해 일제 정기점검을 벌인다. 점검 점검 내용은 ▲신축이음장치 누수여부 ▲교면포장 파손 ▲배수시설 불량 ▲교좌장치 부식 등이다. 점검결과 안전확보가 시급한 교량

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교량 등급별로 구분해 관리 교량보수 및 보강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상반기에도 점검을 벌여 58개 교량에 대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지사장 정 동 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